

전남도, 태양광 발전 제한 보상 건의

산자부, 불철 전력 공급 낮추려 이달부터 출력제한 시행 전남 1356개소 1.9GW 규모...수익 감소·부품 비용 부담

전남도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불철 태양광 출력 제어에 따라 전력 판매수익 감소, 지속 운전 성능 인버터 교체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별다른 예고도 없이 전기가 남아 돈다며 태양광 발전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며, 발전 제한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국전력측에 불철 태양광 발전 출력을 제어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출력제어에 따른 전력 판매 수익 감소분 보상과 지능형 인버터 교체비 지원, 도내 송전계통 보강 등을 산업부에 건의했다. 국회에도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4일 전력 수요가 줄고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철 전력 공급을 낮추기 위해 4월 1일부터 출력제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소 보급이 누적되면서 올해부터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최소화하는 상시 운영 대책만으로는 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밀집된 호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성능 유지기능(LVRT-지능형 인버터)을 갖추지 못한 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속 성능 유지기능이 없는 발전소는 전력 계통에 저전압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 발전소가 멈춰 광범위하게 정전 및 계통 불안정성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출력제어 대상 태양광 발전소는 1356개소로 설비 용량으로는 1.9GW 규모로 자가용을 제외한 도내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의 50.4%를 차지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도 "최근 정부가 이력거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출력제어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2050 실전을 위해선 태양광발전 출력제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대책 및 계통 보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특별출연 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오후 도청 접견실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NH농협은행은 20억 원, 광주은행은 1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출연했다. (왼쪽부터) 광주은행 고병일 행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NH농협은행 정재현 전남본부장, 전남신용보증재단 정양수 이사장. <전남도제공>

전남 지방공공요금 인상 연기

도, 소비자정책위...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협력해 물가 인상 제압이 높은 지방공공요금을 정부 기조에 맞춰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은 도내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통해 담합과 같은 불공정 상거래 행위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전남도는 2021년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2년여간 지속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홍철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송재원 통계청 목포사무소장, 박난숙 한국소비자연맹 전남지회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목포·순천·광양 상공회의소 등 도내 물가 관련 기관·단체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총17.3%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최근 2년간 8.4% 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경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1~2월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5.2%포인트나 상승해 2021년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석 위원들은 당분간 물가 상승 지속이 전망됨에 따라 도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물가 조사 활동과 물가 안정 홍보 캠페인 등 도민 홍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환 부지사는 "물가 상승이 도민 소비 지출과 소상공인 제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AI 사관학교' 전국 청년들 온다

전액 무료·현장 실무 경험 매력...4기 교육생 경쟁률 2.4대 1

전국 유일의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 요람인 'AI 사관학교'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전액 무료 교육이라는 매력과 함께 AI 산업 생태계가 확산하고 있는 광주에서 AI 기업과 협업해 기술·애플을 개발하며 현장 실무를 경험하고 전문 역량까지 쌓을 수 있는 탄탄한 교육 과정을 갖춘 점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4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AI 사관학교의 4기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330명 모집에 779명이 지원해 2.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광주에서 460명이 지원했고, 서울·경기·인천 111명, 경남·북·부산·대구·울산 53명, 대전·충남·북 16명, 전남·북 137명, 제주 2명 등 전국적으로 지원이 이어졌다.

성별로는 남성 522명, 여성 257명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마이스터고 등 만 18세 12명, 19~25세 280명, 26~30세 320명, 31세 이상 166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취·창업 준비생 736명, 스타트업 종사자 43명이 지원했으며, 전공별로는 컴퓨터·정보통신 133명, 공학(전자·기계) 160명, 자연(과학·수학) 76명, 인문 202명, 기타(예체능) 208명으로 분포됐다.

사업단은 1차 서류 심사서와 온라인 기본과정(수준별 기초학습), 기술 역량 검증, 심층 면접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오는 5월에 최종 합격자 3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카카오톡 개발자, 현대모비스 SW(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특강 강사로 참여해 AI 학습법 코칭, 개발 경험과 노하우 공유, 진로·커리어 설계 상담 등 AI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4기 교육은 10개월간 인공지능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내용은 3개의 트랙(AI 모델링, AI 기반 서비스, AI 플랫폼 및 인프라)으로 구성한다.

학생 개인별 교육 수강 목적과 역량 수준 등을 반영해 3개 트랙으로 구분된 10개 반에 배치되며, 6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AI 사관학교 교육장인 광주 대성학원 빌딩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교육비 전액, 교통비, 중식비, 기숙사비, 교재 및 학습 콘텐츠 등 교육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지원받는다. 또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와 함께 AI 전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콘텐츠 및 응시 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핵심은 기업 수요 맞춤형 AI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판단하에 사업단은 과기부, 광주시와 함께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유일의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해 교육생의 취·창업에 돕고, 광주에 창업하거나 이전한 AI 기업은 지역에 안정하게 합으로써 광주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

전남도의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일본 자국민뿐 아니라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공익적인 우려에도 해양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반환경적인 무책임한 행태"라며 "일본 정부는 전 세계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국제범죄 행위를 자행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문제의 본질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 방관, 회피로 일관하는 등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연간 58.4kg로 세계 1위여서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 국내 수산업도 꺾일 것"이라며 "전남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59%인 192만 톤을 생산해 지역수산업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6곳 선정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10개소 중 전남도내 6개 항로가 선정됐다. 선정 항로는 여수 대운도도, 수두라도·소흥간도와 완도 다량도, 초안도·넙도, 진도 상구자도·하구자도, 신안 효지도다.

선박 확보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와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 절감과 함께 섬 주민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로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공모에 선정된 전남 6개 항로 섬 지역 평균 인구는 19명으로 그동안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주민 개인 선박 외에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비용부담이 크고 안전 위험 요소가 많았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의 보편적 해상 교통권 증진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면 운영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 제1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 (茶)

기간 2023.4.29.(토) ~ 5.7.(일) 9일간

장소 보성군 일원 (한국차문화공원 등)

천년의 보성차 세계를 품다!